

'98년 전력산업 정책

글 / 유재열

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 서기관

1. 97년 전력산업정책의 평가와 반성

우선 97년의 전력산업정책을 평가, 반성하고 98년 전력산업정책의 대강을 소개하고자한다.

장단기 전력 수급안정 도모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에너지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하계전력수급의 공급예비율은 7%를 목표로 하였다. 한국전력의 수요관리사업을 대폭 확충하였다. 96년 440억 원이었던 수요관리사업을 97년 540억원으로 확대하여, 빙축열냉방 및 요금구조개선 등 부하관리부문과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등 효율향상에 투자하여 신규전력 설비투자비를 8천억원을 절감하였다.

월성원자력 2호기 등 17개 발전기의 차질없는 준공을 통해 하계전력 예비율 7.3%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준공할 일부 발전소건설은 민원 등으로 인해 지연되기도하였다.

95년 수립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보완하여 97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IMF금융지원 등 경제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수립시기를 98년 3월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및 경쟁력향상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 97년 6월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8년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자발전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확보기준을 개선하고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98년 1월 중에 2차 민자발전사업자를 계획대로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공사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면허를 단일화하고, 영업구역 제한 및 면허 유효기간(5년) 등의 폐지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은 건설관련법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98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외개방에 대비한 원자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96년 12월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계통설계사업과 핵연료 설계사업을 전문업체로 이관하고 구체적인 양수·양도를 추진하였다.

북한경수로 사업은 97년 1월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 97년 6월 재정사무 불이행시 조치 의정서가 타결되고, 7차례의 부지조사를 실시하였고, '97. 8 부지준비 공사 착공식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 전력협력사업의 첫 삽을 떴다. 앞으로 총사업비 및 재원분담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어 차질없이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소비의 건전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전기요금은 소비절약과 적정 투자보수를 확보를 위해 7월 1일에 5.9%인상하였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전기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처리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예방 철저

안전 검사의 철저한 시행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해빙기, 하절기 등 계절별 안전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등 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안전관리 상주대행 대상을 1,000kW미만 시설에서 전 시설물로 확대하였다.

전력산업관련 제도개선 추진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기술개발 확충의 기반을 마련했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토록하고 전기사업자의 전력부문 기술개발 확충을 권고하도록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을 개정하였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발전소 입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였다.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그 지원금을 앞당겨서 사용 가능하도록하고 그 대상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도 포함하도록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을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을 개정하였다.

2.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대외적 여건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97년 1월 국내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전력설비, 발전소 건설부문 개방이 개방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제품은 국제입찰을 하게되었다. OECD에 가입하게되어 최근 다자간투자협정협상에서 전력사업의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IMF금융지원과 관련한 선진국의 전력사업시장 진출이 전망된다

반면에 국내기업의 해외 전력산업 진출도 증가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KEDO의 북한경수로

건설에 한국의 주도하에 능동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한편 한전 등 전력협력사간 공동으로 필리핀, 인도, 중국 등 동남아시아 발전소 건설·운영사업 진출하고 있다.

국가적 특성에 적합한 전력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선진국 또는 에너지자원 부국은 공급능력 여유에 따른 사업효율화, 소비자 보호 및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민영화 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에 개도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발전설비 확보 및 부족한 투자비의 해외조달을 위해 전력시장을 개방 하고 있다. 전력, 가스, 통신 등의 네트워크사업분야의 융합화 추세에 따라 유틸리티 기업 간 인수·합병이 미국, 일본 등에서 진행 중이다.

국내 여건

IMF자금지원 등 변화된 경제여건이 전력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MF금융지원합의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3%수준으로 하향 권고되었으나 전력수요는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 전력산업구조개편, 슬림화 등의 강력한 추진이 전망된다. 기업부도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체납이 증가될 것이다. 물가상승률 5% 이하 안정기저시책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억제가 전망되나 환율, 유가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시에 요금 현실화 가능성도 내재되어있다. 참고로 멕시코의 경우 IMF금융지원후 전기요금에 20% 인상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등의 추이에 따라 국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넘비현상에 기인하는 발전소 입지 확보난이 심화되고있고, 한편 전력회사는 SOx, NOx, 분진저감설비설치를 추진 중이다.

정밀기계, 전자, 통신 등의 산업비중 증대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품질 전기공급,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한전이 통신, 방송등의 비전력사업에 진출하고, 반면에 발전사업에 민간의 경쟁을 도입하고, 특정 전기사업과 전력직판범위확대 등을 포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점

전기의 과도한 소비가 문제다. 에너지를 97% 이상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너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수지 적자 및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설비 확충의 어려움이 점증되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 전력설비 기피현상, 자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전력설비 입지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대외적인 여건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지방화, 개방화, 경쟁체제에 맞는 지원기반이 미흡하다. 한전이 독점공기업으로 공익성과 기업성을 견지해 왔으나, 앞으로 전력사업환경은 한전도 여러 전력사업자중의 한 위치로 되는 변화를 맞고 있다. 일반전기사업자의 공익성이 이완되는 반면, 기업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등 공익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민자발전의 확대, 발전사업자의 직판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수급전망능력확충, 전기사업자간 분쟁조정 등 공익성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공급사로서의 한전에 기술개발투자, 전기수요관리투자 등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전으로서도 공익적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효율기기개발 등 수요관리, 전기사업자를 위한 인력양성, 표준화, 정보화사업, 전력플랜트 수출 등 전력사업기반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전원입지의 안정적 확보 지원이 부족하다.

남북한 및 동북아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통일을 대비한 전력설비연계 방안 및 자원 마련이 필요하고, 나아가 동북아 송전선 연계를 통한 부하관리 및 전력유통 도모를 위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3. 전력정책 방향

기본 원칙

- 시장경제 원리 견지
- 공익성과 보편적서비스를 보장
- 산업진흥과 공익규제의 균형 유지

목 표

- 환경보전의 바탕위에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 전력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기본 방향

- 전기 절약 및 수급안정
-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
- 전력산업 구조개편
- 에너지, 환경 조화
- 전기안전사고의 예방
-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 전력산업 기반조성

4. '98년 주요 전력정책

IMF체제하의 장단기 전력수급 안정도모

98년 경제성장률 3%, 에어컨보급 등의 추세를 반영시에 98년 하계전력수요는 7.2% 증가가 예상되어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과 기후변화협약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장기전력수급계획 재조정이 필요하다.

98년 여름철 수급안정을 위해 수요관리 및 공급 능력 확충으로 공급예비율 7%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울진원전 3호기 등 14개 발전기를 6월이전 준공을 완료하고, 현재 16개소에서 운영중인 열병합발전소를 시화 염색공단, 진주 상평공단 등 4개소에 신규로 건설추진한다.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 등 각종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최대수요를 절감하고자 한다. 에너지최저효율 기준제도의 운영을 강화한다. 대상품목의 확대, 효율기준 상향조정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 판매금지를 강력히 추진한다. 수요관리투자를 98년에는 633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한전 등 주요 에너지공급자의 투자규모를 2003년까지 매출액 대비 1%수준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절약전문기업과 연계한 수용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을 대폭 확대한다. 신축건축물에 대한 고효율기기 사용의무화 및 연간 전력사용량 1천만kWh이상의 85개 다소비 건물을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절전을 위하여 네온사인, 전광판 등의 사용제한을 주요 골자로하는 {전기사용을위한조정·명령}을 98년 1월 5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중심으로 98년 하계전력수급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세부수급 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보완중인 장기전력수급계획(97~2015) 수립시에 반영할 주요내용은 경제성장률 등 수요예측관련 주요 경제지표 반영을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등 수요관리 시책을 강화하고, 원자력 및 LNG 발전소건설확대 등 CO₂ 배출저감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력수요 재전망에 따른 발전/송배전 설비계획을 재조정한다. 동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설비 건설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발전원별 경제성 제고 및 민전사업 확대방안을 강구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장기전력수급계획시안 작성후 공청회 및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후 3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체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국제유가 및 환율 등 전기요금의 변동요인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료비 연동제 등 요금제도 개선방안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98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6.5% 상향 조정하여 시행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하여 2000년까지 OECD 비산유국 평균요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할 계획이다.

정전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사전에 정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 수용가의 비상발전기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배전자동화를 통한 정전의 피해최소화 및 복구시간을 최단화 한다. 피해가 발생된 경우 피해배상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저압의 자가용전기설비는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안전공법을 반영하여 전기설비 기술개정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재정확충을 지원하여 전기안전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민간사업자의 전력산업 참여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도모한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운영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한전도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 재정부담완화 및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슬림화 등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출한 비전력사업 분야인 정보통신, 방송사업을 재조정할 수 있고, 건설관리기능을 축소하고 턴키베이스프로젝트발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특정전기사업제도 도입 및 자가발전사업자의 전력직공급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특정전기사업제도는 일정한 사업구역(지점)내에서 전기를 발전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배전하는 소규모의 전기사업자이다. 전력직공급범위확대는 자가발전사업자의 전력직점 공급범위를 일정한 지역안에서 직접 타 소비자에게 공급할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98 상반기까지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특정 전기사업 및 전력 직공급범위 확대 방안을 반영할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주요추진과제로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기본 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영국형, 프랑스형, 미국형, 일본형 등 4개 유형을 검토한다. 한전의 조직개편을 수반하는 개편방안이 있다. 한전의 발전, 송전, 변전 및 영업부문을 분리, 사업부별 독립채산제 등을 검토한다. 전력산업부문에서의 동등한 경쟁추진여건을 확립한다. 민간의 전력산업참여에 따른 한전과의 동등한 경쟁여건 도입, 송·배전망의 개방에 따른 전력공급관리체계의 구축,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독립규제기구설립방안 등이 심도있게 검토된다. '98. 10까지 종합적인 전력산업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원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수출산업화 유도

교토기후변화협약체결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의무화되어 우리나라도 규제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경제적인 원전의 지속적인 건설이 불가피하다.

현재 가동 중인 12기의 원전은 총 발전설비의 25%인 10,316천kW에 달하며(발전량 기준 약 34%) 추가로 6기 5,400천kW의 원전이 건설중에 있다.

한편, 국내 원전건설과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 대한 수출방안을 적극 모색중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원전 예방 정비의 철저 및 장·단기 고장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로 원전 안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감축 및 영구 처분장 확보 등 저장·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원전기술의 완전자립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기술고도화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기개발된 100만kW급 한국표준형 원전기술(경수로)을 고도화하고 경제성과 안전성이 보다 향상된 130만kW급 차세대 원전개발을 적극 추진('92~2001)한다. 원전기술의 저변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민자원전 추진을 적극 검토한다. 원전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기위해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발전소건설 입지의 안정적인 확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5,7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추진(발전소건설 입지소요 44개소)할 계획이다. 소요 입지중 25개소는 이미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9개소는 발전소 건설시기를 감안하여 확보 추진하여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을 위해 '97년 695억원의 지원금을 '98년에 1,283억원(588억원 추가지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및 중앙정부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원전주변 거주제한 지역의 합리적 조정 등으로 민원을 해소한다. 환경 친화적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기 위해 탈황설비 등 선진수준의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지역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사업에 호의적으로 협조하는 지역과 그러하지 아니한 지역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전력설비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므로 요금수준을 낮게하고, 반면에 설비가 적은 지역은 요금을 높게 운영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적용제도입을 검토한다.

전력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기술기반조성사업에 한전이 4,098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력사업에 과다한 부담초래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전력기술개발, 전기안전관리 등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전력분야 벤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선진국과 같이 전력, 통신 등의 네트워크사업의 통합추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한 통합하부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배전자동화, 자동점검 및 CATV 등에 활용할 CATV망을 전국적으로 구축중에 있다.

전력관리기술법에 따른 제1차 전력기술진흥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의 주요골자로는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기기, 전기절약기기 및 고효율전력설비 등 중장기기술개발과제 발굴하고 한전,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역할분담 및 지원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5천kW 용량의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건설을 위해 400억원을 투자한다. 대체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는 한전이 전량 구매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전기절약 벤처중소기업 창업과 구매 지원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설립등 전력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지원에 300억원을 지원한다.

전력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전기절약기기개발, 전기안전관리강화, 기술기준제정, 인력양성, 통일대비전력사업 등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기요금인상분, 전기사업자의 출연 등으로 공익재원(가칭 "전력산업촉진기금")을 마련하고 기관별 업무추진체제를 수립한다. 일본의 경우 전기사업촉진세법에 의해 전력판매 kWh당 0.445엔을 적립하여 기술개발, 지역지원사업 등의 활성화에 쓰고있다.

CATV망을 활용하여 서비스개선을 도모한다. 한전 CATV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배전자동화 및 자동검침등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하여 양질의 초고속 멀티미디어서비스기반을 제공한다. 이렇게하므로서 2010년보다 10년 단축된 2000년초까지 4조원의 예산으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남북연계방안 검토

현재 진행중인 남북전력 협력사항으로는 북한 경수로사업이 진행중이고, 장기전력수급계획상 2000년초에 약 1~2%의 예비전력을 확보중이다. 북한 경수로원전사업은 미국, 일본 등 관계국이 재원부담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의 중심적 역할"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원을

분담하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중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남북교류를 위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동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재원이 중요한 문제로서 전술한 가칭 "전력산업촉진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동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의 통일 외교적인 시각에 보조를 맞추어 현실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련제도의 개정추진

전기사업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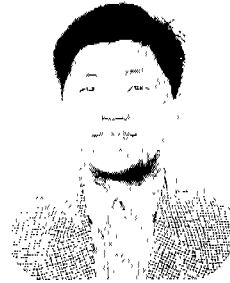
특정전기사업제도 도입, 전력직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에너지로 개발된 전기를 한전이 구매를 의무화하도록하고, 전력사업기반조성을 위한 전기사업촉진재원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방향은 특정전기사업제도의 관할구역은 지점(건물단위)으로 추진하되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전력직공급 범위는 동일구내로 한정된 것을 자가발전사업자가 일정지역내에서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체에너지로 개발한 전기를 전량 일반전기사업자가 구매를 의무화하도록한다. 전기기술개발 등 사업내역, 지원조달장치를 마련한다.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기술개발 촉진 및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제도 도입을 위해 동법을 '96. 6에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법령 시행중의 문제와 기업규제완화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중심을 개편이 필요하다. 건축 관련법들과 감리부분에 대한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설계업, 감리업외에 전력시설물 진단업을 신설하고, 기술사·설계사의 설계영역 조정, 일괄하도급 제한조항 신설 등을 한다.

전기공사업법 개정

국내 전기공사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면허체제와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97. 5 규제개혁회의 의결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기공사업 면허 단일화 및 영업구역제한 철폐한다. 면허 유효기간(5년) 폐지 및 수급한도액 제한제도의 개선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다. Cable Tray 이용 시공공법 관련기준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 지하공동구에 저독성난연 전선 사용 의무화한다.

전기사업법은 98년 상반기중 개정 추진하고, 기타 법령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유재열

태 생 : 1958.6.12(경북 대구產, 본적은 서울)
 학 력 : 1981 성균관대학교 전기공업과 졸업
 1992~1994 영국 University of Sussex의
 SPRU(Science Policy Reach Unit),
 과학기술정책학 석사

군 약력

1981~1983 ROTC 통신장교 중위제대

직장 경력

1983~1986 대우전자
 1986 기술고등고시 22회(행시30회)
 전기직합격
 1987~1990 동력자원부원자력발전과,사무관
 1990~1992 동력자원부 전력수급과
 1992~1994 영국 서섹스대 SPRU
 과학기술정책과 석사
 1994~1995 상공자원부
 전기전자공업국 정보진흥과
 1995~1996 통상산업부 생활공업국
 전기공업과
 1996 서기관승진
 1996~현재 통상산업부 전력심의관실
 전력정책과, 정책서기관

가 족 : 변수현(邊琇鉉, 1963.6.24)씨 외 2녀

취 미 : 등산, 여행

한국전기안전공사, MOF(계기용 변압변류기)에 대한 과전류강도 적용기준 유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당초 계획으로는 '98년 1월 1일 공사계획신고(인가)분으로부터 MOF(계기용 변압변류기) 과전류강도에 대한 검사판정기준을 적용·시행함에 있어, MOF(계기용 변압변류기) 제조업체로부터 '97. 12. 31 까지 제작 및 시험이 완료되어 보유·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사용인정 요구를 검토한 바 '98. 12. 31까지 제작 및 시험완료한 MOF(계기용 변압변류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98. 1. 1 이후 제작 및 시험분 부터는 개선된 과전류강도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